민주 "비상한 각오"…與에 최후 통첩성 압박

'대화록 실종' 특검법안 발의…검찰수사 맞대응
국조특위 증인 채택 난항…전면 장외투쟁 시사

민주당은 30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며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검찰 고발로 검찰 수사를 이끌자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섰다.

이같이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새누리당에 끌려만 다닌다'는 당내 강경 주장을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은 전날 저녁 비공개 모임을 갖고 당 지도부의 정국 대응태도를 집중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투쟁으로 가나**=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조의 근본 목적이 위협받는다면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전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 주변에서는 '전면적 장외투쟁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가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것은 이번 국조 활동, 특히 하이라이트인 청문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달 7일부터 이틀간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일주일 전인 31일까지는 증인 ·참고인 채택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증인·참고인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법 발의**=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범위는 ▲지난 대선 기간 대화록이 불법으로 새누리당에 유출된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 경위 및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부실의혹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문건 불법적 대선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의혹 및 인지된 사건 일체 등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상과 관련해 "1차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1차적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화록 유출 사건은 국기문란 버금가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한 대화록 실종사건은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한 사건이나 대화록을 불법으로 선거에 활용한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진 의원, 박민수 의원, 부좌현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김대중 전대통령 묘소 찾은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 위기에 빠진 당 어떻게 할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30일 오전 오랜만에 서울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이 매주 화요일 묘소를 찾고 있지만 박 의원은 단 몇 차례를 제외하곤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비상한 각오로 동참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놓고 묘소의 김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박 의원 주변의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엔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박기춘 사무총장을 함께 만나 당 지도부에 훈수를 뒀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란 호재를 만나고도 현 지도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이 무기력하다. 여당에 끌려다닌다. 지도부가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선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어떻게든 국조를 해야 한다. 김현·진선미 의원이 (증인으로) 나가도 충분히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양보하더라도 원세 훈·김 영관·김무성·권영세를 끌어내야 한다. 여당 측 인사들이 휴가 갔다고 국조를 연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단하라고 해라. 특검으로 가야 한다. 다행히 오늘 특검법을 발의했다. 어떻게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맡기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장 내일에라도 의총을 소집해서 투쟁력을 높여라. 지금은 싸울 때다. 잘못하면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죽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죽는다"며 "당장 장외투쟁은 동력이 없어 어려울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동력을 키워가자. 나중에 보고대회 형식으로 장외집회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선 후보·지도부 선출시 '예비경선' 폐지

당내 공천제도혁신위 "계파주의 청산·선거비용 절감"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조경태 의원)가 당 지도부 선거, 대통령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 관계자는 30일 "공직후보자선거와 지도부 선거에서 예비경선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며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비경선은 출마한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 수를 추려낸 뒤 본경선을 실시하는 제도다. 예비경선을 하면 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에 유권자들이 소수 후보자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고 세(勢)가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없애는 대신 본경선에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 했으나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때 대의원 투표(50%)와 당원 투표(50%)를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투표로만 후보자를 결정해오던 것에서 당원의 참여를 대폭 늘린 것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동작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열어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광역단체장의 상향식 공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태 위원장은 "당의 권력은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당원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후 시·도별 지역 공청회를 10차례 이상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께 혁신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의 최종 입장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법무부, 체포동의안 제출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한국사 수능 필수' 찬반 의견 팽팽

국회 역사대책특위 공청회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가 30일 국회에서 실시한 한국사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대입제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필수과목화가 한국사 교육을 내실화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사를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떼어내 별도의 과목으로서 시험을 치르게 하자"면서 "이는 다른 사회과목들의 존립 기반과 무관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사회과교육학회의 박형준 교육과정위원장은 "수능 필수과목이 되는 순간 한국사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과목으로 전락한다"면서 "역사적 흥미는 반감되고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후폭풍도 우려된다"면서 "한국사를 별도의 영역으로 지정하면 한국사의 사교육 부담은 국·영·수와 같은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박춘란 대학정책관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증가문제, 수능체계 개편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3층, 4층 시네마 분양완료
CGV 영화관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드롭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지상2층 레스토카페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3층~4층 영화관 분양 및 CGV계약완료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